

포괄적 스웨덴 공중보건정책의 추진전략과 평가체계

박 남 수 /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본 연구는 스웨덴 국가보건정책의 추진전략과 평가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포괄적 스웨덴 보건정책(comprehensive swedish public health policy)은 2002년 public health objective(공중보건목표)라는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2003년 스웨덴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는 보건(건강)문제를 정치적 아젠다로 부상시켰으며, 형평성을 보건문제의 높은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건강결정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구조와 관련된 요인, 국민의 생활양식이나 습관에 관련된 요인에 대응하는 방향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을 위한 올바른 필수 조건을 창출하고, 건강위험을 제어하거나 최소화시키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며, 각종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개인이나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활동이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국가, 지방, 지역, 민간기관 등의 다부문간의 노력을 통한 목적달성을 위해 3개의 중점과제 영역별로 11개의 목표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보건정책의 전략으로 이전 정책들이 질병 또는 건강 문제에 근거한 것이 비해 건강 결정요인을 채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각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보건정책목표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국가보건목표의 평가를 매 4년마다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NIPH)로부터 발간되는 public health policy report, 국가보건위원회로부터 나오는 National public health report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두 개의 보고서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2005년 발간된 국가보건정책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건강결정요인 접근은 비교적 잘 이해되고 있음, 결정요인에의 노출을 추구 관리하기 위한 지표의 사용

은 매우 중요함. 보건 분야이외의 영역에서의 역할과 지원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함. 정부와 다른 정치적 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방향성체시가 필요함. 자치단체수준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협력과 사업수행을 위한 더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함, 성공적인 건강증진의 선결요인은 자치단체와 지역 의회 등에 의해 이미 제공되어졌거나 제공되고 있는 활동들을 보건학적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임.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국민건강증진정책 2020의 수립에 있어서 목표 및 전략의 구체화, 효율적인 실행협조 및 지원체계의 구축, 지속적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사료된다.